

이란 핵 합의 파기 가능성과 시사점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unisa21@posri.re.kr)

목차

1. 트럼프 취임 이후 미-이란 갈등 고조
2. 핵 합의 파기 가능성 ①: 미국의 對이란 강경정책
3. 핵 합의 파기 가능성 ②: 이란 대선 영향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함 이슬람 7개국 국민의 美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**반이민 행정명령 발표, 미-이란 간 긴장관계 고조시킴**
 -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의 핵 합의 재협상 시도를 위한 것으로 트럼프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이란의 핵 합의 파기를 공언
 - 이란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월 29일에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對美 무력시위를 벌임
-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대이란 강경책을 통해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
 - 미국은 핵 합의 관련 4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, ① ‘기존 핵 합의 파기’, ② ‘기존 핵 합의의 재협상’, ③ ‘강력한 압박 속 기존 핵 합의 이행’, ④ ‘미국의 경제적 실리가 보장될 시 기존 핵 합의 유지’ 등임
 -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핵 합의 파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, 다자간 협상에 의한 합의(P5+1 및 이란)를 쉽게 파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
-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란 강경책을 사용해 이란 스스로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
 - 실제로 미 상원은 지난해인 2016년 12월 1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이란의 반발을 불러왔음
 - 또한 올해 5월 19일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이란에서도 보수강경파의 대미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선에서 보수강경파의 결집이 강해질 전망
 - 대선에서 보수강경파 집권 시 미-이란 간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어 이란의 핵 개발 재추진과 이로 인한 핵 합의 파기 및 ‘스냅백’ 부활 가능성도 높음
- 핵 합의 파기 시 국내기업들의 이란 既진출 사업 및 신규사업 확대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
 - 특히 핵 합의 파기로 ‘스냅백’ 부활 시 미국의 ‘세컨더리 보이콧’이 발동되며 이란에 대한 제재는 2015년 7월 핵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
 - 따라서 이란 진출 기업들은 미-이란 간 갈등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규사업은 이란 대선 결과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
 - 하지만 이란 기업과는 거래선 유지 및 확대 노력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우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

1. 트럼프 취임 이후 미-이란 갈등 고조

□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금지 등이 포함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해 이란의 반발 야기

○ 이란도 대응 조치로 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월 29일에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對美 무력시위를 벌임

- 미국은 이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 비난하며 이란의 13명의 개인 및 12개 단체에 대한 즉각적 제재조치 발표

·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빌미로 핵 합의 파기 압박

○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미-이란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관계도 커지고 있음

- 美 국방부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

- 이란 또한 혁명수비대의 실전 훈련을 늘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맞대응

· 양국 갈등 증대로 이란뿐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성도 커질 전망

〈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-이란 주요 갈등 현황〉



자료: 주요 일간지 정리

○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로 미-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, 이는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짐

-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“2015년 7월에 합의된 이란 핵 협상은 잘못된 것으로 핵 합의를 파기할 것”이라고 공언

2. 핵 합의 파기 가능성 ①: 미국의 對이란 강경정책

□ 트럼프 행정부 및 미의회 공화당의 對이란 정책은 2015년 7월에 합의된 이란 핵 협상 파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

-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과의 핵 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핵 합의의 폐기를 주장함
- 트럼프는 취임 1주일 만에 이란을 자극하는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는 등 핵 협상 파기 수순을 밟음
 - 그러나 이란 핵 협상은 미-이란 양자협상이 아닌 P5+1(미국·영국·프랑스·중국·러시아·독일)과 이란 간 다자협상 결과물로 모두가 동의해야 변경 가능
 - 협상 당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이란 핵 재협상에 부정적 입장이며 이란 역시 핵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
- 미국은 핵 합의 파기가 어려울 경우 이란을 자극하여 이란이 먼저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높음
 - 미국은 지난해 12월 1일 상원에서 향후 10년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독자적인 이란 제재 강화
 -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“이란에 대한 제재가 지속된다면 핵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”고 말하는 등 핵 합의안 파기 가능성 언급
- 트럼프는 이데올로기와 사업적 이해관계를 고려 4가지 협상 시나리오 검토 후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시나리오 1: ‘기존 핵 합의의 파기’로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, 중국,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와의 관계 악화 및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
 - 시나리오 2: ‘기존 핵 합의의 재협상’ 시도로 이는 일부 협상 참여국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란의 반대가 클 것으로 전망
 - 시나리오 3: ‘미국의 기존 핵 합의 이행’으로 현 합의 자체는 유지하면서 미사일 시험 등 사소한 합의 위반 시 강력 대응하는 시나리오
 - 시나리오 4: ‘미국기업들의 이란시장 진출 확대를 전제로 이란 핵 합의 유지’로 미국이 실리를 취하는 시나리오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은 반발

☞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핵 합의 파기가 쉽지 않아 이란 압박용으로 활용할 가능성 높음

〈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관련 시나리오들〉



자료: Cornelius Adebahr, "Trump, the EU, and Iran Policy: Multiple Pathways Ahead",
Carnegie Europe, 2017.1.31

□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이란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

- 특히 이란과의 거래 시 달러결제 불가 및 '프라이머리 제재(Primary Sanction)' 지속 등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국내외 입지를 약화시키는 전략 구사
 - 이를 위해 미국 내 동결된 이란 자산의 반환을 지연시키면서 이란 경제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압박
 - 현재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은 약 20억 달러로 이란은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음
- 그러나 'American First'를 주장하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트럼프의 장기적 이란 압박은 제한적일 수 있음
 - 트럼프는 "이란은 미국이 핵 협상으로 준 1500억 달러로 프랑스 에어버스 비행기 114대를 사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못 팔아 먹고 있다"고 언급함
 -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란으로부터 항공기 80대(166억달러) 구매 계약을 체결한 보잉사에 대해 취소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는 등 美 이익 우선시
 - 보잉사는 이란과의 항공기 80대 계약 이행으로 美國 내에서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함

- 또한 이란 핵 협상 유지 시 약 16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란 유전 프로젝트에 미국 석유업체들의 참여도 재개될 수 있음
- 지난해 12월 로열 더치 셸이 이란 남부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계 석유기업들이 이란 신규 유전개발 선점 중

3. 핵 합의 파기 가능성 ②: 이란 대선 영향

□ 트럼프 취임 이후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올해 5월 19일 치러질 이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- 미-이란 긴장 고조로 이란 보수강경파가 결집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 온건 성향의 로하니 현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
 - 보수강경파의 상징적 인물인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“트럼프가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”며 강하게 비판
 - 이란혁명수비대(IRGC)는 미사일 시험발사 및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함정에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미국과의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음
 - IRGC의 이런 행동은 로하니 대통령의 의도라기보다 강경보수파를 대변하는 혁명수비대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로하니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함
- 로하니 재선의 또 다른 걸림돌은 미국 경제제재 지속과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이란의 경제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점
 - 2015년 핵 협상 타결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전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음
 - 그러나 미국의 제재 지속과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이란 경제성장은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
 - 2015년 7월 핵 협상 타결 후 경제수준이 나아진 게 없다고 응답한 이란인이 4분의 3에 육박(Gulf News 2.6일자)

□ 현재까지 로하니 대통령에 맞설 강력한 경쟁자는 없지만, 4월 후보 등록기간(4.10~4.14일)이 다가오면 보수파의 결집도 강해질 전망

- 특히 로하니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전 대통령 라프산자니가 1월 8일 사망하면서 온건파의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점도 보수강경파에는 호재

- 현재 이란 보수강경파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前 테헤란 시장 갈리바프가 로하니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음
- 그는 2013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로하니와 경쟁한 바 있으며, 2017년 1월 19일 테헤란 고층건물 붕괴사고의 책임을 지고 테헤란 시장직에서 사임함

〈이란 주요 대통령 후보 및 성향〉

	하산 로하니(Hassan Rouhani)	바케르 갈리바프(Bagher Ghalibaf)
성향	온건 보수	강경 보수
직책	現 대통령	前 테헤란 시장
지원세력	하타미 前대통령 등 개혁세력	아흐마디네자드 前대통령 등 강경세력
지지율('16.12)	48.5%	31.8%

자료: iPOS (<https://www.ipos.me/en/>), Shabtabnews, January 26, 2017

- 로하니의 재선 가능성이 높지만 미-이란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이란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수강경파 집권도 가능
 - 로하니 대통령도 최근 이란 보수강경파를 의식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을 '초보 정치인'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미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
- 강경보수 성향 인물의 대통령 집권 시 미-이란 간 관계 악화 및 강대강(強對強)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- 또한 최악의 경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선제적 핵 협상 파기 선언 등 대미강경 정책 실행도 예상됨

4. 시사점

-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-이란 간 갈등 고조 상황은 이란 진출을 확대하려는 국내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
- 가능성은 낮지만,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이란 핵 합의 파기를 고려 중이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
 - 만약 양측의 긴장관계 고조로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이란 진출 확대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

- 특히 핵 합의 파기에 의한 ‘스냅백’* 발동 시 모든 제재는 2015년 7월 핵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감 *스냅백(snapback): 이란 핵 합의 파기 시 이전의 경제제재 부활
- 스냅백 발동 시 제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‘세컨더리 보이콧’이 시행되어 이란에서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됨
- 스냅백 발동 시 대이란 수출의 급감과 건설사들의 이란 건설 수주 차질이 예상되는 등 큰 타격을 받을 전망
- 실제로 최근의 미-이란 긴장관계 고조로 이란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미루어지고 있음
- 이란 진출 계획을 추진했던 독일 지멘스, 프랑스 토탈, 영국 보다폰 등 해외 기업들은 트럼프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
-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 관련 계약 체결도 이어지고 있지만, 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음
- 핵 합의 파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,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강화가 예상되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지원을 꺼리는 것도 사업 이행의 걸림돌임
- 공사재원 대부분을 발주처(이란)가 아닌 시공사(기업)가 금융을 통해 책임지고 조달해야 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금융조달이 가장 중요함
- 국내기업들은 미국의 對이란 정책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월 19일에 치러질 이란 대선결과 발표 시까지 이란 사업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
- 미-이란 간 긴장관계 고조로 5월 19일 대선에서 강경보수 성향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, 이 경우 미-이란 간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
- 또한 현 로하니 대통령 재선 시에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‘세컨더리 보이콧’* 발동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한 후 이란 사업 지속 여부 판단 필요
- *세컨더리 보이콧: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, 은행 등을 제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리 보이콧 보다 제재범위가 넓음
- 하지만 이란 기업과는 인적 네트워크와 거래선 유지 노력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우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홈페이지]

iPOS (<https://www.ipos.me/en/>)

[언론]

Shahir ShahidSaless, “Help comes from US for Iranian hardliners”, *Special to Gulf News*, 2017.2.6

Cornelius Adebahr, “Trump, the EU, and Iran Policy: Multiple Pathways Ahead”, *Carnegie Europe*, 2017.1.31

Ladane Nasser and Golnar Motevalli, “Trump's Deal Threats Hang Over Iran's Election”, *Bloomberg*, 2017.1.17

Shabtabnews, “Iranians believe Trump will violate nuclear deal”, January 26, 2017